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 금주의 GVC Insight



#### 최신 GVC 해외 이슈

**【코로나·봉쇄,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이 시의 단계적 봉쇄와 그 영향

**【콜드체인, 중국】** 4월 1일부터 베이징 진입 수입 콜드체인 식품 검역 강화

**【전해알루미늄, 중국】** 중국내 재고량 감소세

**【천연가스, EU·미국】** 미국, EU의 對러시아 의존도 축소 위해 LNG 추가 공급 발표

**【통상·규제, 미국·러시아】** 미국 의회 내 러시아를 비시장경제(NME)로 지정 요구 비등

**【금융, 일본】** 일본 3대 대형 은행, 러시아 은행과 달러 거래 중단

**【경제·무역, 미국·중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중 수입 352개 품목의 관세 면제 연장

**【IPEF·공급망, 미국】**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민관 TF 회의 개최



#### GVC 뉴스 더하기

- ① 바이든 美 대통령 EU 방문, 美-EU 정상회담에서의 에너지 공급망 관련 주요 합의사항
- ②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합의



#### GVC 기초상식

- 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 ② 누적 원산지 규정



#### GVC 돌보기

미 뉴욕 연준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측정 지수, GSCPI



#### GVC 전문가

- ① BloombergNEF(에너지 컨설팅 기관) - 배터리 산업 동향 (2)
- ② 스자오웨이(Willy C. Shih, 하버드대 교수) '공급망의 질적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네 가지



#### GVC 소식통

- 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안내
-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FAQ) (2)



#### 더 찾아보기

- ①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경제안보' 세미나 개최,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공급망(사례)
- ② '반도체 대전 2030'(저자 : 황정수) 책 소개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 최신 GVC 해외 이슈

### ● 【코로나·봉쇄,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이시의 단계적 봉쇄와 그 영향

- 상하이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市 전체를 동부(3.28-4.1)와 서부(4.1-5)로 나누어 각 4일간 봉쇄,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기로 발표 (市 혁신 선별 검사 통지 긴급 발표(상해시정부, 3.27))

- 3.25~26일 하루 확진자 수는 2천명 돌파한 후, 3.29일 약 6천명에 달함

〈 최근 1주일 중국 및 상하이시 확진자 현황 〉

확진자수	3.23	3.24	3.25	3.26	3.27	3.28	3.29
중국 전체	4,732	4,790	5,600	5,604	6,215	6,886	7,156
상하이시	983	1,609	2,269	2,678	3,500	4,477	5,982

- 시민 생활과 기본 운영에 필요한 물, 전기, 가스, 통신, 교통, 환경미화, 식자재 등 공공 서비스 기업 외의 기업은 출근과 공장가동이 중지됨

- (중국기업) 바오우(宝武) 철강그룹(부동소재 공장), 화웨이 상하이 생산공장, 상룽전자(尚隆电子, 아이패드 대리 공장) 등 푸둥지역 소재 제조사 생산공장은 가동 정지
- \* 다만, SMIC(中芯国际) 및 일부 반도체 공장은 선전시 사례와 같이 봉쇄식 관리下 공장 가동 허용(3.29)
- (외자기업) 유통, 증권, 도매/소매 등 기업은 재택근무 실시, 테슬라 등 제조 기업은 가동 중단

- 【물류영향】 선박 입출항 및 하역은 가능하나 창고 운송 및 화물 인수에 차질 발생

- 항구, 공항, 철도의 국제 화물·여객 운송 모두 정상 운행(국제항만그룹(3.27) 및 방역위원회(3.28))
-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는 해당 운송회사의 방역지침에 맞춰 화물 인수증과 48시간 이내의 코로나 검사 결과(음성) 증빙을 휴대한 채 차량 운행이 가능하나, 서류를 갖추고도 타 지역에서 상하이發 화물기사 및 화물 접수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

※ 상하이시 푸둥 지역 육상운송 차질 현황

\*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 ▶ 9개 상하이 주변 고속도로 출구에 대해 교통통제, 톨게이트 폐쇄, 터널·교량 통행금지 시행
- ▶ 다수 물류기업들이 창고 내 화물 반출입 업무를 4월 1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
- : 창고 운영을 비롯해 컨테이너 픽업지가 막히는 등 물류 흐름에 차질 발생 중

- 【생산영향】 IT, 중공업, 철강, 화학제품 등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상하이 인근 지역에 공장이 있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하이 지역 내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일부 우리기업은 생산 차질이 불가피

- \* 상하이 정부에서 민생 업종으로 인정할 경우, 제한적 회사업무가 가능하다고 알려졌으나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음

- 【수급영향】 상하이에 사무실을 두고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인근 도시에서 물류가 원활치 않아 원자재부품 공급이 어렵고, 코로나 확산으로 공장 인력의 출입에 제한이 많아 업무상 차질이 우려

- \* 관리직 직원들은 최근 1-2주간 이미 거주지 봉쇄로 매일 50%이상 출근 불가 → 3.27일 봉쇄 발표로 사무실마저 봉쇄

☞ 통관 및 내륙물류(Trucking)가 지체되면서 물동량 감소 및 비용 상승이 불가피

- 특히 최근 원유 및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물류비 인상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

☞ 봉쇄가 장기화 될 경우 상하이 진출 우리기업의 생산 및 수급으로, 업무차질 등 피해가 늘어날 전망

☞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3.29(화) 제22차 산업자원안보TF를 개최하여 상하이시 봉쇄에 따른 공급망 영향을 점검

- “상하이시 내 한국 기업의 생산법인수가 적고, 주요 항만 정상 가동으로 산업공급망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태 악화 및 장기화에 철저한 대비 필요”

※ 기업 애로 및 지원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1670-7072(대표전화)

출처 : 한국무역협회(상하이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3.29) 등

● **【콜드체인, 중국】 4월 1일부터 베이징 진입 수입 콜드체인 식품 검역 강화**

- 베이징시 정부는 4.1일부터 수입 콜드체인 식품으로부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해 베이징 진입 콜드체인 식품 검역을 강화
- △베이징 진입 시 '베이징 콜드체인'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 △베이징 진입 전 검문소에서 검사 진행(현재 26개 검문소 지정), △유통 경로 관리 강화 등 추진
  - \* 대상 식품 범위 : 육류, 수산물, 저온 신선 수산물, 식량, 유제품, 채소, 과일, 식품 등 냉동제품 및 국내 원산지로 표시된 갈치, 평어, 붉은새우, 흰새우, 대구, 버들치, 가자미 등 수산물도 포함
- 베이징 정부는 최근 대규모적인 산발적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감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해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

출처 : KOTRA 베이징무역관, 中新網

● **【전해알루미늄, 중국】 중국 전해 알루미늄 재고량 감소세 (3.29)**

- 3월 들어 중국 전해 알루미늄 재고량 지속 감소세, 3.28일 기준 101.4만 톤으로 집계
- 전해 알루미늄은 에너지 다소모, 환경오염 유발 산업으로 중국 정부는 생산능력 확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은 전력난, 탄소중립화 전환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있음
  - 전해 알루미늄 1톤 생산 시 전력 소모량은 13,500kWh
- '21년 중국 전해 알루미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8% 소폭 증가한 3,850만 톤이었으나, 러-우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며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전역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어 알루미늄 생산망·유통망 불안정이 심화
  - 한편, 전해 알루미늄 생산기업의 이익은 대폭 개선 → 3월초 톤당 순이익 5천위안 상회(신장 지역 기업의 순이익은 7천위안/톤)

출처 : KOTRA 베이징무역관, 중국 경제매체 財聯社

● **【천연가스, 미국·EU·러시아】 미국, EU의 對러시아 의존도 축소 위해 LNG 추가 공급 발표**

- 미국과 EU 집행위는 3.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유럽의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 축소를 위해 연내 150억㎥의 액화천연가스를 EU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
- 이를 위해 양측은 에너지 보안 TF를 구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확대를 위한 협업을 약속하였으며,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 현재 미국내 LNG 플랜트는 최대치로 가동되고 있으며, 유럽에 약속한 분량은 미국이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이 될 것으로 보임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U 집행위원회, Euractiv

● **【통상·규제, 미국·러시아】 미국 의회 내 러시아를 비시장경제(NME)로 지정 요구 비등**

- 롭 포트만 상원의원(공화당)은 러시아 경제의 70%는 정부(국영기업)에 의해 운영된다는 근거를 토대로 러시아를 비시장경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美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ITA)은 '21년 7월 러시아를 시장경제권(Market Economy)으로 계속 인정할지를 조사했으나,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 낸 바 있음
- 비시장경제권으로 지정하면, 美정부는 해당국 반덤핑 조사 시 추가 고율 관세 부과가 가능해지므로, 강력한 무역 제재 수단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

출처 : KOTRA 워싱턴무역관

● **【금융, 일본·러시아】 일본 3대 대형 은행, 러시아 은행과 달러 거래 중단**

- 일본의 3대 대형 은행 그룹인 미쓰비시UFJ(三菱UFJ),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미즈호(みずほ) 은행은 3.26일부터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의 달러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 이는 미국 정부가 스베르방크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발맞춘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對러시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에너지 부문은 달러 거래가 많은 상황인 바, 달러 송금을 할 수 없게 되면 일본 기업의 무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향후 결제를 위한 대체 수단은 러시아에 거점을 둔 유럽계 은행들이 될 것으로 예상

출처 :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요미우리신문

● **【경제·무역, 미국·중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중 수입 352개 품목의 관세 면제 연장**

- 3.23일, USTR은 대중 수입품목(352개)에 부과 중인 301조에 따른 관세의 한시적 면제를 결정
    - 트럼프 정부가 승인했던 549개 품목의 관세 면제가 2021년 말 효력 종료, 바이든 정부는 평가 후 이 중 352개 품목의 관세 면제 연장을 결정(연말까지)
  - 연장 기간은 2021.10.12~2022.12.31이며, 이전 부과된 관세는 소급하여 면제 처리 예정
  - 관세 면제 품목은 소비재, 식품류, 제조업 부품, 기타 최종재 등으로 USTR은 해당 제품의 중국 외 대체 수입 가능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힘 (일각에서는 미국내 높은 인플레이션을 면제 원인으로 지목)
    - 관세 면제 품목 명단 상세 : 미국 관보 게재 내용
-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notices/FRN%20for%20Notice%20of%20Reinstatement.pdf>
- 업계는 기대 이하의 제한적 관세 면제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로, 의회는 입법을 통해 대중 301조 관세 면제 범위 확대를 추진 중임

출처 : KOTRA 워싱턴무역관, 미국 무역대표부

● **【IPEF·공급망, 미국】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민관 TF 회의 개최**

-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9(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 민관 TF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학계·전문가와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함
- IPEF는 '21.10월 미국이 제안한 구상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는 실물경제의 新신통상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력구상체임
- \* ①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②공급망 회복력, ③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④조세·반부패의 4개 분야 협력 추구
- 여 본부장은 IPEF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이슈 협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힘
- 업계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IPEF 논의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통상,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등 분야에서 기업의 유리한 입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상무부·USTR)이 IPEF를 통해 역내 신통상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통상 강국인 우리나라(산업부·통상교섭본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디지털·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규범선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산업정책-통상정책, 실물경제-통상이 융합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3.29)



## GVC 뉴스 더하기 ① : 바이든 美 대통령 EU 방문, 美-EU 정상회담에서의 에너지 공급망 관련 주요 합의사항

※ 3.24~25일 NATO·G7·EU 정상회담 개최 및 바이든 대통령의 EU 방문을 계기로 **대서양 양안간 에너지 부문 등 협력 강화 합의**에 진전을 보임. **對러 추가 제재 합의는 없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러시아 천연가스 판매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 대응**, 에너지 의존도 감축, 방위력 강화 등을 논의함

### ● 공급망 관련 주요 안건별 핵심 논의사항

#### (1) (미-EU)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및 對러 에너지 의존도 축소

- 유럽 에너지 공급 및 안보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 발족, (1) LNG 수입선 다변화, (2) 천연가스 수요 조절이 목표

##### 〈 미-EU 에너지 협력 태스크포스 주요 합의 내용 〉

- 1) 對EU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공급 (22년 연말까지 최소 150억 입방미터 추가)
- 2) LNG 물류 인프라의 친환경성 제고에 공동 노력
- 3) EU측의 신속한 LNG 수입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정비
- 4) EU는 '30년까지 연간 미국산 LNG 500억 입방미터 구매 추진
- 5) 유럽 내 천연가스 사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수단 강화
- 6) 재생에너지, 수소연료 등 확대를 위한 투자, 기술 협력 확대



자료 : EU 집행위

#### (2) (對러 대응) 천연가스 판매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에 대해 '계약 위반' 강경 입장

☞ 3.23일 러시아, 국제사회 제재에 대응해 '비우호국으로부터 가스 판매대금 루블화로만 받겠다' 선언

- 러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과 유럽이 체결한 가스 장기계약 40건 이상, 일일 결제대금 2~8억 유로 추정
  - '22.1월 기준, 가스프롬의 판매대금 약 58%가 유로화, 39% 달러화로 결제

- (주요국) EU 집행위 및 회원국 정상,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 EU 집행위원장은 동 조치를 제재 우회 시도로 간주,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로 EU를 협박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단호한 입장
- (업계) 기업별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가스 공급중단에 대한 우려 증가**
  - Eneco(네덜란드), PGNiF(폴란드), OMW(오스트리아) 등 일부 기업들은 계약 조항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Eni(이탈리아), Shell·BP(영국), RWE·Uniper(독일) 등은 관련 언급을 거부
- 푸틴은 천연가스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지만, 루블화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 고조
  -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는 정부에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대비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안해달라 요청

### (3) (에너지) 가스 공동구매 합의했으나, 가격 상한 등 에너지시장 개혁 난항

- EU의 높은 구매력을 활용, 보다 경쟁력 있는 입찰을 위한 '자발적' 가스 공동구매 추진 합의, 집행위가 제안한 가스비축 의무화도 지지
  - (EU 구매력) 집행위원장, "전 세계 파이프라인 가스 시장의 75%가 유럽, 엄청난 구매력"
- 다만 독일이 이미 민간에서 가스를 구매하고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 보여, '의무' 공동구매가 아닌 '자발적' 참여 수준으로 조정
- 아울러 서부 발칸국가와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등 3개국도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서부 발칸국가)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 한편 에너지 시장개혁 관련, 지중해 4개국(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에너지 가격 상한 필요' 입장, 반면 독일은 '시장개입에 회의적' 입장으로 정상간 합의 불발에 따라, 집행위가 '22.5월에 발표할 '에너지 전략(REPower EU)' 세부 실행계획에 관심 증가

#### ● 현지 반응, 전망 및 시사점

- (對美 에너지 공조) 미국의 에너지 공급 계획은 유럽 에너지 수요에 과부족 수준이라 진단(블룸버그), 한편 러-우 사태로 미국 에너지 업계 호황도 전망(폴리티코)
  -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연간 1,5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수입 중으로, 미국의 '30년까지 500억 입방미터 공급 계획으로는 에너지난 타개 난망
  - '22년 1월 미국의 對EU LNG 수출은 44억 입방미터로 전년 동기대비 두 배 증가, 현재 유럽 국가들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아시아로 LNG 물량 확보 중
  - 한편 미국 내 원유 생산 급증, 하루 1,200만 배럴 전망(전년 대비 7.1% 증가), 러시아 제재 후 러시아산 원유 공급 축소(하루 3백만 배럴 감소)에 따른 효과로 분석
- (對러 제재) 에너지 수입 중단보다 대체 방안 마련에 논의 초점
  - 정상회의 합의문에 '추가로 강력한 제재를 채택할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했으나, 3.21일 개최된 EU 국방외무장관 회의에서 러産 원유수입 금지 합의 도달에 실패하는 등 추가 제재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보다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 '22.5월 집행위가 발표 예정인 세부 실행계획 모니터링 필요
- (對中 견제) 중국을 겨냥한 듯 회의 합의문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여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 서방 동맹과 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4.1(금) 예정된 EU-중국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
- (전략적 자율성) 러-우 사태 계기로 △핵심원자재(CRM), △반도체, △보건, △디지털, △식품 등 핵심 부문에서 강력한 무역 정책 추진,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기반을 강화할 전망

※ (생각해보기)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자원 분야는 '70년대 오일쇼크 등을 겪으며 공급망 관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영역임 → 이를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공급망 업무에 적용해보자 (비축, 수입선다변화, 민·관 협력 등)



## GVC 뉴스 더하기 ②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합의

※ EU-27 정상들은 2030년 유럽의 기후변화대응 목표인 1990년 대비 55% 배출 감축을 위해, 3.15일 이사회에서 탄소누출 예방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전적으로 합의했음. EU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진 일정 및 주요 내용 등을 검토해보고자 함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개요

- (의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 간 감축 노력의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 제한 조치
  - 탄소국경세(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와 유사하나, 탄소국경세보다 다양한 형태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넓은 의미로 해석
- (도입 의미)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국가에 위치한 기업의 피해를 완화
  -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국가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생산비용이 증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없는 국가로의 사업장 이전 및 경쟁국가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존재
- (내용) 수입업자들이 EU 배출권거래제 경매가격에 상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입해 EU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시행
  - 수입업자는 CBAM 인증서 수, 수입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수입제품의 유형별 총량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된 'CBAM 신고서'를 매년 5.31일까지 EU에 제출해야함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주요 내용

- (대상품목) 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으로 EU 집행위(안)과 동일하나, 시멘트·철강·알루미늄 내 일부 하위품목 추가 (총 8개의 \*표시항목)

분야	HS코드	해당 CN 코드
시멘트	25	252310, 252321, 252329, <b>252330*</b> , 252390
전력	27	271600
비료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
철강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b>7326*</b>
알루미늄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b>7610*</b> , <b>761100*</b> , <b>7612*</b> , <b>761300*</b> , <b>7614*</b> , <b>7616*</b>

자료 : EU 이사회

- (최소기준) 대상품목 중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150유로 이하인 수입(per consignment)에는 적용 면제
  - 행정당국 및 기업의 부담경감 위해 최소 기준(minimum threshold) 설정
- (산정방식) 배출량 산정 시, 집행위 상정안과 동일하나, 디폴트 배출량의 경우 품목별 수출국 평균 배출량을 바탕으로 산정하되 국가별 수치 파악 불가 시, 동일 품목의 EU 역내 배출량 상위 X%의 평균치\* 적용
  - 집행위 법안에는 10%로 지정. 이사회는 추후 집행위가 시행령 등을 통해 X값을 마련하기로 결정
- (적용국가) EU로 수출하는 역외국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및 일부 외부영토는 면제

- (차감청구) 원산국에서 지불한 탄소비용의 차감 요청 가능하나, 이사회는 환급·보조금 등을 포함해 **실제 지불한 가격만 차감에 고려**하도록 함
  - 수입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인증서 제출일로부터 4년간 보관 필요
- (우회방지) 상품변경, 선적분할 등 모니터링 대상인 **우회행위 명시**
  - (예시) 대상품목을 부분 변경해 HS코드를 바꾸는 행위, 수출금액을 인위적으로 150유로로 맞추는 방식 등
- (담당기관) 집행위 법안대로 회원국별 관할당국을 지정·운영하되, 이사회는 국별 등록부 대신 **EU 차원의 중앙등록부를 구축해 거래내역을 기록**하도록 합의
  - 집행위는 회원국별 등록부 및 EU차원의 중앙 DB 설치를 제안했으나, 이사회는 상기 두 기관을 통합한 중앙 등록부 구축에 합의. 유럽의회가 수정안에서 제안한 EU 차원의 단일 CBAM 관할당국 설치에 미반영

#### ☞ 중앙등록부(Central Registry)

- 수입자 등록정보 및 CBAM 인증서의 거래내역 등을 기록하고 회원국으로 공유
    - 수입자(신고자) 정보, EORI 번호, CBAM 계정번호, CBAM 인증서 판매가격, 구매·수량·제출·재구매·취소일 정보 등
  - 집행위는 중앙등록부를 설치하고 거래내역에서 특이사항 발견 시, 해당 회원국으로 통보
- (모니터링·보고) 2025년말까지 집행위의 CBAM 평가 및 의회·이사회 보고는 동일, 이사회는 **2027년 말까지 심층영향 보고서 제출 후 매 2년 주기 보고**를 요청
    - 과세대상에 간접배출량 및 타 품목으로의 CBAM 확대 검토 포함

### ● 향후 일정 및 시사점

- 2023.1.1일 시행을 위해 **연내 최종합의안 도출 추진**, 동향 모니터링 필요
  - 이사회는 집행위·의회와 3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나, 협상 이전에 무상할당, 수출환급, 수익금 사용 등 미합의된 사안의 최종입장을 확정해야 함
  - 올해 상반기 의장국인 프랑스는 동 사안을 별도로 두고 입법 추진을 원하지만, 의회가 반대하고 있어 EU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
- CBAM 적용범위 확대에 대비,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 내 배출 감축 노력**
  - 집행위와 이사회 지지로 과세대상은 직접배출량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EU는 추후 간접배출 포함 여부를 비롯해 CBAM 대상품목 확대를 검토할 계획
  - 탄소배출이 큰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 포집기술 활용 등 친환경적 생산 노력을 통한 선제적 대비
- 전환기간 동안의 **탄소배출량 측정체계 구축 및 배출권 가격 모니터링**이 필요
  - CBAM 적용대상 기업들은 2~3년간 시행될 전환기간 동안 제품의 탄소배출량 측정방법을 숙지하고, 관련 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함
  - 집행위·의회·이사회 등 EU 3자 동의로 인증서가격은 ETS(배출권거래제도) 경매가격과 연동될 예정인 바, 구매비용 절감을 위해 EU 배출권 가격의 트렌드 파악 필요

※ (생각해보기) EU는 기업의 산업·에너지 활동에서 발생한 불공정의 문제를 통상 수단으로 조정하고자 함  
→ 공급망의 세계에서는 산업·에너지·통상 등 실물경제가 하나로 연결 → 분야별 전문성과 연결적 사고가 중요

## GVC 기초 상식 ①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지난 3.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음. CPTPP는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과 함께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다자간 무역 협정이며 한국은 가입 신청을 추진하고 있음

### 1.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개요

- 아·태 지역에서 **포괄적인 자유화 및 시장 개방과 참여국간 무역 장벽 해소를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
- **총 세계 GDP의 13%, 교역액의 15%**를 차지\*(20년 기준)하고 있는 거대 경제 권역으로 향후 확장 가능성 큼
- \* 회원국(11개국) : (GDP) 10.7조달러(세계의 12.7%), (교역) 5.2조달러(14.9%), (인구) 5.1억명(6.6%)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아·태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 지대로 통합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로 구성

### 2. CPTPP 경과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17.1 미국의 탈퇴 선언 → 총 11개국\*이 CPTPP로 명칭 변경한 후 '18.12.30 발효
- \* 초기 협상참여국(4) :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06년까지)
- \* 추가 협상참여국(8) : 미국('08.2월), 베트남·호주·페루('08.11월), 말련('10.10월), 멕시코·캐나다('12.10월), 일본('13.4월)
- 일본은 '12.1월 협상 참여 사전협의 개시 → '13.2월 마일 정상회의(참여 기정사실화) → '13.3월 참여 선언 → '13.4월 참여 승인

### 3. CPTPP 가입 필요성

- **(전략적 가치)** 우리는 대외 개방으로 성장해온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FTA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 필요
  - \* 수출시장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큼
- **(공급망 강화) 원산지 누적\*** 인정으로 회원국의 중간재 사용시 원산지 충족이 용이한 바, 아·태지역 **역내 공급망 강화 효과** 기대
  - \*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역내산 재료를 사용 시, 해당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
  - \* 또한, 중간재 수요가 역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전환되는 등 역내 가치사슬(RVC)에 편입되는 효과 발생
- **(시장확대)** 멕시코(FTA 미체결국), 베트남·말련·일본(FTA 체결국) 등의 관세 철폐로 우리 **주력산업과 농수산물의 수출시장 확대**되는 등 **상대국의 상품·서비스 등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가능하게 됨

## GVC 기초 상식 ② : 누적 원산지 규정

오늘날 기업은 글로벌 경영 및 원자재·중간재의 수출입에 따라 한 국가에서 생산·판매 등 가치사슬의 모든 공정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FTA, RCEP, CPTPP 등은 지역통합 협정으로서 **역내국 간의 거래는 동일한 원산지로 인정하는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함

### ● 누적 원산지 규정(Cumulative Rules of Origin)

- 협정을 맺은 국가 내에서 원재료를 조달할 경우 모두 국산 재료로 간주(원산지를 역내산으로 인정)하여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
- 예를 들어 생산공정의 모든 부분이 특정 한 국가(A)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협정 내 국가간 여러 국가(B,C,D)에서 같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를 최대한 A 국가 원산지로 반영하여 관세 면제  
즉, 역내국을 국내로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역내 조달 수준을 일정 비율 이상만 유지하면 됨

누적 원산지 규정의 개념(한미 FTA의 경우)



### ● 원산지 결정 기준

-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원산지 규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원산지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기도 함  
\* 결정 기준의 기본원칙 :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 이때, 역내 생산을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 판정은 적용 법령 및 협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이 상이한데, 실무적으로 각각의 규정과 개별 품목의 HS Code를 기준으로 원산지 규정을 파악하고 판정을 수행

### ● 스파게티볼 효과

- 여러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
-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난립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증명등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협정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이를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부르고 있음

※ (사례) 각 국가와 체결한 FTA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적용될 경우, FTA 체결국이 많아질수록 이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증가 →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출을 할 경우, FTA에 따른 관세 인하는커녕 면제받은 세금을 반환하거나 벌금까지 징수당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가 높고, 중간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스파게티볼 효과를 해소하고 기업의 협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RCEP·CPTPP와 같은 다자간 역내 무역협정 체결이 유리**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자무역협정 참여를 '놀이동산에서의 자유이용권'에 비유)

### ●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 (참고)

- (누적 원산지 기준의 활용)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 부가가치 기준 충족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등 발급
- (역내 공정 설계) 최종 수출국을 고려하여 역내 국가와의 원산지 충족을 위한 연결 공정을 사전 설계
- \* 단, 상대국의 보호산업의 경우 MFN(최혜국 대우)세율 또는 여러 협정 중 양허관세가 낮은 협정의 활용 필요



## GVC 돋보기 : 미 뉴욕 연준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측정 지수, GSCPI

※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 이와 관련, 미국 뉴욕 연방준비위원회는 'A New Barometer of Global Supply Chain Pressures'(2022년)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압력을 측정하는 GSCPI(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지수를 발표

### ●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급망 교란은 세계 경제의 핵심 문제로 부상

- 그동안 공급망 교란의 정도를 측정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 공급망의 일부 측면만 고려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음
- 미 뉴욕 연준은 GSCPI(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개발로 기존의 한계점과 약점을 극복하고자 함
  - 동 지수는 BDI(발틱운임지수) 등을 활용,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포괄적으로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음
- GSCPI의 계산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 압력을 가하는 여러 요인을 변수화하여 지수에 포함시킴

### ● GSCPI의 특징

#### 1)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경 간 이동비용인 해상운임과 항공운임을 지수 산출에 활용

- 해상운임과 항공운임이 모두 '20년 팬데믹 이후 급등함

#### 2) 국가별 변수로는 개별 국가의 생산 데이터와 생산자관리지수(PMI)가 사용되었음

- 시계열 자료의 기간이 충분하고,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가 높은 국가의 ① 지체 기간\* ② 제조 산업\*\* ③ 재고량을 변수로 사용

\* 조달·생산·판매 등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지체 기간을 수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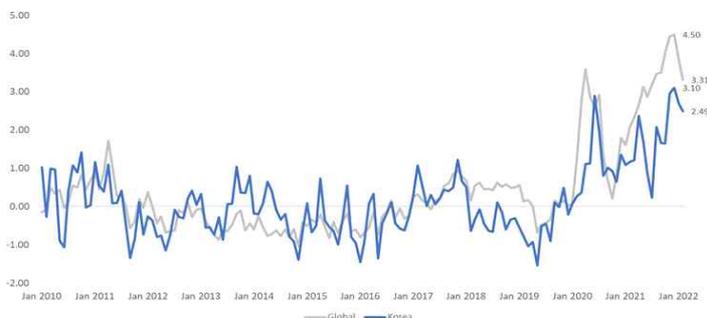
\*\* 기업의 신규 수주 이후 생산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제조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수치화

#### 3) 지수가 0보다 큰 값일수록 압력이 크다는 의미

### ● GSCPI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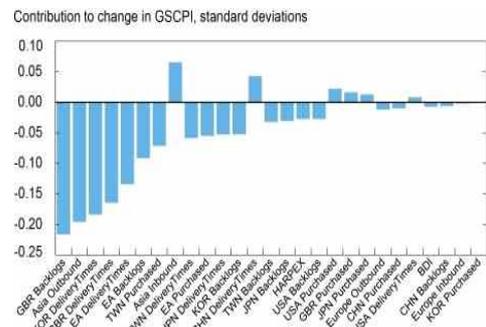
- 팬데믹 직전인 '20.1월 글로벌 GSCPI 지수는 0.05에 불과했으나 동 지수는 '21.12월 중 4.50으로 급상승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가해지는 압력이 매우 높아졌음
- 이후 '22.2월 3.31로 다시 하락하며 일부 정상화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평균(=0) 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장기적 안정을 위해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

〈우리나라와 글로벌 GSCPI〉



(자료: 뉴욕 연방준비은행)

〈'22.2월 GSCPI 구성요소 감소치〉



(출처: 뉴욕 연방준비은행)

- 한국의 경우, 물류 운송 시간(Delivery Times)과 지체 기간이 최근 감소하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GSCPI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중. 그러나 미 연준은 국가적 특징에 따라 개별국의 GSCPI가 변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공급망 압력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

## GVC 전문가 ① : BloombergNEF(에너지 컨설팅) - 배터리 산업 동향 (2)

※ 3.17~19일 서울에서 개최된 배터리 전문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2'에서 에너지 전문 컨설팅 기관인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가 글로벌 배터리 산업 동향을 소개한 바 있음. 지난호에서 소개한 이차전지 및 전기차 산업 동향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EV(전기차)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 가격 추이 및 향후 EV 판매 전망을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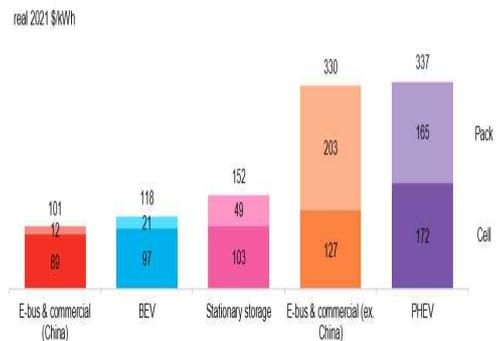
### ● 최근 10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은 지속 하락, 수요 산업별 최근 가격은 상이

- 지난 10년간 리튬이온 배터리팩의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은 약 90% 감소

- '10년 \$1,220/kWh → '21년 \$132/kWh (자동차 등 배터리팩 거래 기업 수집 내부 정보 기반 조사)

- 수요 산업별 배터리 가격은 상이, 우측 그래프 내 왼쪽(빨강)은 중국 전기버스·상업용 전기차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학제품인 리튬인산철을 원재료로 하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저가

〈수요 산업별 2021년 배터리 가격〉



- 또한 치열한 경쟁과 해당 차종의 수요가 큰 영향도 존재

- 중국 이외 지역 전기버스·상업용 전기차(주황) 배터리팩은 가격이 높은 편으로, 배터리 부화합재료로 높은 에너지밀도의 고가 니켈 코발트, 망간(삼원계 : NC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만큼의 시장 경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제조 규모 역시 중국만큼 크지 않고, 주문량이 적은 것도 요인 중 하나

### ● 향후 배터리 가격은 지속 하락이 예측되나, 단기적으로는 상승 요인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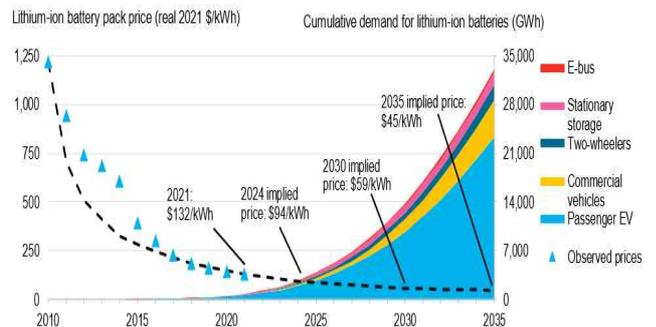
- 배터리 가격은 지금까지와 같은 추세로 지속 하락이 예측되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에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22년 연초에는 전년 대비 상승

- 전년대비 LFP 11%, NCM(니켈·코발트·망간) 16~17% 상승

- 그러나 '22년 연간으로 보았을 때 약 3% 미미한 상승이 예측되며, '23년부터 다시 하락세 전망

- 현 추세(학습률 18% 가정)대로라면 EV용 배터리팩 가격은 '24년 kWh 당 100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요 자동차 세그먼트에서 EV(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것을 의미

〈리튬이온 배터리의 적용 분야별 수요〉



- 학습률 17% 가정, 현재 인플레이션 효과가 장기화되는 경우, 배터리팩 가격 kWh 당 100달러 이하가 되는 것은 '26년으로 예측

### ● 주요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 인하에 따른 쏠자동차섹터 EV 도입 확대 필요

- 현재 예측대로 배터리팩 가격이 추이한다면 2040년 승용차 판매의 70%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상용차 등 섹터에서 더욱 높은 비율의 EV 판매가 이뤄져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가능

- EV이륜·삼륜차 및 버스는 넷제로를 위한 판매궤도에 올랐으나, 중형 및 대형 상용차의 EV 도입 비율이 현재 5% 미만으로, 2040년 약 30% 정도가 EV로 대체되어야 넷제로 달성 가능

☞ 배터리 가격↓ → EV 가격↓ → 자동차 섹터별 EV 판매↑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선순환 기대

※ 다음호에서 마지막으로 '배터리 산업동향(3) - 원자재별 공급망 이슈와 가격 추이' 소개 예정



## GVC 전문가 ② : 스자오웨이(Willy C. Shih, 하버드대 교수) '공급망의 질적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네 가지'

※ 지금까지의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용의 효율화였으나, 코로나19와 환경 이슈,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공급망의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이에 Harvard Business School의 경영학 교수 Willy C. Shih(스자오웨이)는 Harvard Business Review에 'Are the Risks of Global Supply Chains Starting to Outweigh the Rewards?' (22.3.21)를 기고하여, 오늘날 공급망 문제에서 고려해야 하는 네 가지 요소를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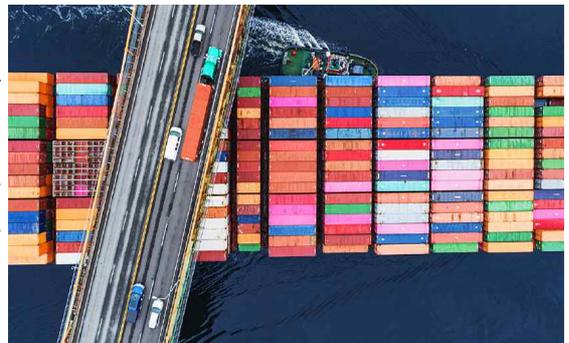
### ● 주요 내용

#### 1) 지리학 및 지정학적 요인

- 지난 30년간, 아시아는 낮은 인건비를 중심으로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이러한 높은 지리적 집중도는 공급망의 회복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속되는 미·중 무역분쟁, 팬데믹 등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가에서 공급망 문제 발생
  -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한 금속, 희귀가스, 농산물 공급난이 지리적 집중의 위험성을 드러냄
-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공급망이 내재화되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임
  - 반도체 공급난의 만성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노력 중

#### 2) 물류

- 대다수의 기업은 높은 물류비와 공급망 병목으로 피해를 입은 반면, 일부는 수혜를 입는 양분화가 발생함
- 항공화물 및 컨테이너 해상 수송 비용이 증가하며, 단순 가공을 위해 가치가 낮은 재화를 먼 거리에서 조달하는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



#### 3) 저탄소화와 지속가능성

- IMO(국제해사기구)는 '21.6월 모든 국제 무역 상선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에 합의했으며, 발효 이후(23년 예정) 해상운송에 큰 변화가 예상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집중 배출 산업국 위주로 적용이 시작되나,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며 영향을 미칠 것

#### 4) 공급망에서의 협력관계

- 과거에는 공급망 관리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약자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음. 장기적으로 공급망의 안정성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급망 내 협력관계로 변화 필요

### ● 시사점

- 기존 공급망은 단순 비교우위에 의한 가격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으나, 이제부터는 질적인 성장과 안정화가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비효율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관행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① 지리학/지정학, ② 물류, ③ 저탄소화와 지속가능성, ④ 공급망에서의 협력관계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공급망의 시대를 준비해야 함

## GVC 소식통 ① : 러-우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안내

###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 러시아데스크: 02-6000-6498 / 6499 · 수출통제 제도문의: 02-6000-6384 / 6440 · 통제품목 문의: 02-6000-6381 ~3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 금융제재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02 조원 · 중소기업 지원자금: 06 조원
	수출입은행 ·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 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상담창구: 1600-7119(2 → 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 · 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 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 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물류 지원 (KOTRA 유망기업팀 2-3460-7428)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 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타 지역 긴급 운송 또는 대체 바이어 찾는 과정 중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KOTRA 물류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창고보관 및 입출고, 포장, 통관, 반품,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 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비즈니스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 대상	러시아 변호사의 수출제재 상세내용, 러시아 기업 조회, 계약서 검토 등 지원
⑦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쳐 3년 분할 ·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 GVC 소식통 ②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FAQ) (2)

※ 러-우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의 애로 지원을 위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비즈니스 애로지원 가이드 30문 30답’\*을 마련하였는 바, 매주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통하여 관련 내용 중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비즈니스 애로 30문 30답 전문 다운로드 \(클릭\)](#)

### ● 수출품목

Q	우리나라가 FDPR(직접제품규칙) 면제국임에도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 시 적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DPR 면제국은 美상무부의 허가 대신에 해당 국가(한국 등)의 자율적인 수출통제에 따라 수출을 진행한다는 의미임.</li> <li>• 따라서, ① 러시아 FDPR과 관련된 7개 분야 57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수출, ② Entity List에 등재된 자와 거래, ③ 최종 사용자가 MEU(Military End User)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기업은 우리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함.</li> <li>• FDPR에 합의한 수출 허가 외에도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출 허가의 대상이 되며, 전략물자 및 비전략물자 수출 시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보험부보 대상 수출거래 및 대금 결제과정에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 및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말아야 함</li> </ul> <p>※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2.3.14. 변경·조정한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단기 국별 인수방침에 유의해야 하며, 수출결제조건(신용장·무신용장별)에 따른 승낙조건과 부보율은 아래표 참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국가</th> <th>신용장</th> <th>무신용장</th> </tr> </thead> <tbody> <tr> <td>러시아</td> <td> <b>건별승낙</b>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 중소기업 90% 이내                 </td> <td> <b>건별승낙</b>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 중소기업 90% 이내                 </td> </tr> <tr> <td>벨라루스</td> <td> <b>건별승낙</b>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 중소기업 90% 이내                 </td> <td> <b>건별승낙</b>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 중소기업 90% 이내                 </td> </tr> </tbody> </table> <p>* 건별승낙 : 하나 또는 수 개의 수출계약서(또는 신용장)별로 보험인수금액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회전 운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p>		국가	신용장	무신용장	러시아	<b>건별승낙</b>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 중소기업 90% 이내	<b>건별승낙</b>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 중소기업 90% 이내	벨라루스	<b>건별승낙</b>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 중소기업 90% 이내	<b>건별승낙</b>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 중소기업 90% 이내
국가	신용장	무신용장									
러시아	<b>건별승낙</b>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 중소기업 90% 이내	<b>건별승낙</b>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 중소기업 90% 이내									
벨라루스	<b>건별승낙</b>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 중소기업 90% 이내	<b>건별승낙</b> • 부보율 - 대기업 70% 이내 - 중소기업 90% 이내									
Q	FDPR에 해당되는 제품을 제3국으로 우회하여 수출할 수 있나?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이고 수출통제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환적 등에 의한 <b>우회 수출 루트와 관계없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함</b></li> </ul>										

### ● 카드사용

Q	러시아 내에서 <Visa>와 <MasterCard>사용이 가능한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6일부로 비자와 마스터 카드의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나, 러시아 은행에서 발행한 카드라면 <b>현지 사용 가능</b>. 러시아 내 거래는 러시아 국가 카드지불시스템에서 처리되므로, ATM기 사용, 각종 요금 지불, 이체 등의 거래기능이 유지됨.</li> <li>• 그러나, 해외상품 및 서비스 비용 결제와 해외에서 직접 사용은 불가함.</li> </ul> <p>※ 외국은행 발행 &lt;Visa&gt;와 &lt;MasterCard&gt;는 러시아 내 사용 불가</p>

### ● 제재 관련 최신 정보 및 애로 지원 안내

[KITA ALERT\(클릭\)](#), [수출입물류포탈\(클릭\)](#)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비즈니스애로 지원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더 찾아보기 ① :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경제안보' 세미나 개최(3.24)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공급망(사례)

※ 지난 3.24(목) 대외경제정책연구원(김홍중 원장)과 한국국제정치학회(김상배 회장)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경제안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동 세미나에는 양측 1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의 발제·토론이 이어져 최근 관련 논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됨 (유튜브에서 다시보기 가능)

아래에서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이준구 교수의 발표 내용('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중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 부분을 소개하고, 최근 공급망 관련 기사와 함께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함

### ● 이준구 교수 발표 내용 중 발췌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는?)

#### - 산업·제품·기업별 공급망의 구조적 특성과 기업 행위자의 전략적 행동의 중요성

- 모든 공급망이 같지 않다 : 산업별, 제품별로 상이한 구조적 특성(생산, 시장 등), 전략적 rallying point vs. 의외의 대상(예 : 요수소), 완제품의 탈의존 ≠ 중간재의 탈의존
- 모든 공급망의 노드가 같지 않다 : 기업간 거버넌스(수직 또는 수평), 네트워크 배태성의 영향, 기업의 입지 선택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좌우
-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생산지·공급망·시장을 전환(switching)하거나, 제품·공정·기능의 고도화(upgrading)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우회

#### - 국가들의 대응 전략의 영향

- 양 당사국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전략도 중요 (예 : 탈중국 기업을 잡기 위한 동남아 국가들의 노력)
- 국내외 제도·정책들의 연계와 상호작용이 규제 효과를 상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

#### - 새로운 변수들 : 기술(디지털화, 자동화), 새로운 시장(다품종 소량생산, 신흥개발국 시장) 등의 요인

### ● 최근 관련 기사 :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표준화' SCM(공급망 관리) 파장 ('22.3.29. 전자신문 1면)

-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부품 표준화를 추진함.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부품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고 제조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임. 부품 표준화에 따라 협력사별 물량 조절 등 공급망 관리(SCM)에 대격변이 예상

-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협력사에 호환성 높은 범용 부품 개발을 주문함. 삼성은 지금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부품과 중저가폰 부품을 구분함. 새롭게 추진하는 호환성 확보 방안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중급 스마트폰을 가르는 핵심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품을 공유하는 방식임.

- SCM에서 예기치 못한 공급 문제가 발생해도 빠르게 대체 부품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안정적인 공장 가동이 가능해짐. 생산단가도 낮출 수 있음. 부품 종류가 감소하면서 SCM도 단순해져 원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음. '부품 표준화'가 궁극적인 목표임.

- 부품 업계는 삼성의 전략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음. 협력사별 양산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여러 부품 제조사가 호환이 가능한 유사 부품을 동시에 생산하면 수율, 생산단가 등으로 공급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임. 부품사별 단가 인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음

### ● 평가 및 시사점 : 현장에 기반한 디테일과 플레이어를 감안한 동태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

- 공급망·실물경제의 주체는 기업인 만큼,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전략적으로 계속 상황 변화에 대응함. 산업·제품·기업·기술·시장 등 공급망 상황을 현장 기반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더 찾아보기 ② : '반도체 대전 2030' (저자 : 황정수) 책 소개

※ 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산업이 주목받으며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한국경제신문 황정수 기자가 실리콘밸리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취재한 '반도체 대전 2030'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K반도체가 나아갈 길을 찾아보고자 함

### ● 불 붙은 반도체 전쟁

-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전이 되어 미국, EU, 일본, 중국 등 각국은 국가 안보·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기반 접근 중
  - 반도체 내수화와 핵심 소재 공급망 다변화, 기업 간 M&A를 추진하며 국가적 차원의 공격적인 조치와 투자를 단행

### ● 중국 굴기를 향한 미국의 규제 전쟁

-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년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중 500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전략 사업이자 국가의 인프라라고 강조
- 또한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향한 적극적 견제를 시작,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 화웨이를 대상으로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

☞ 美 상무부 '20년 5월 15일 발표,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외국 반도체 제조 업체는 미국의 허가(라이선스)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다' [20년 9월 시행]

- 한편 규제 이후 1년 이상 지난 현 시점,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우세
  - 화웨이는 한 때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기록, '20년 4분기 세계 6위로 추락 ('15년 이후 5위 이하를 기록한 적 없음)
  - 화웨이 사업 모체인 통신장비, '20년 4분기 규제가 본격화되자 전 분기 대비 시장점유율 2%p 감소하여 3위 기록(중국 제외)

### ● 대격변 속 메이저 플레이어로 등장한 파운드리

- 최근 들어 시장 트렌드가 바뀌며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엔비디아, 퀄컴, AMD와 같은 팹리스 업체와 팹리스의 주문을 받아 맞춤형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음
  - 파운드리 대표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전 세계 상장사 중 아시아 기업 시가총액 1위 ('22년 연초 기준)
- (TSMC) ①[기술력]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 함께 선폭 5나노미터 반도체 생산 가능, ②[다양한 포트폴리오] 레거시 공정이라고 불리는 전통 공정(범용 반도체 생산 28·40·45 나노미터 공정 등)도 가능
-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1위 달성 위한 '반도체 비전 2030'을 '19년 4월 발표, '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특히 파운드리)에 133조원 투자 결정 → '21년에는 개정판으로 파운드리에 171조원 투자 발표
  - ▶ '20년 삼성 파운드리 매출 17조원, '19년 15조원 대비 13.3% 증가. TSMC와의 격차는 존재하나, 꾸준한 실적 상승 중

### ● 반도체 전쟁의 미래

- 종합반도체 기업의 영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텔(간판제품인 PC용 CPU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하는 상황). 그러나 최근 인텔은 미 정부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고 3D 크로스포인트 기술을 활용한 '옵테인' 브랜드로 D램 보안, 데이터센터용 저장장치 등 출시를 통해 부활을 시도 중
- 한편 K반도체는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최첨단 패키징에 집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세제 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합동 전략을 추진 중임



##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을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코트라 등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b>한국비철금속협회,</b> <b>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b> <b>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b> <b>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b>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b>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b>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b>한국수입협회 (4)</b>
에너지		<b>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b> <b>한국석유공사 (3)</b>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b>대외경제정책연구원,</b> <b>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b>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지역 봉쇄조치에 따른 공급망 현안 점검

###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mailto: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 글로벌 경제지표('22. 3. 30. 수)

## [환율]

	'20.12.31	'21.12.31	'22.2.28	'22.3.25	'22.3.28	'22.3.29	전일비	'21말비
₩/US\$	1,186.30	1,188.80	1,202.30	1,218.80	1,227.30	1,219.80	△0.61	2.61
선물환(NDF, 1월물)	1,186.30	1,190.00	1,203.20	1,219.50	1,228.20	1,220.40	△0.64	2.55
₩/CNY	166.04	186.51	190.52	191.54	192.62	191.47	△0.60	2.66
₩/¥100	1,051.19	1,032.48	1,040.86	1,002.25	996.83	988.17	△0.87	△4.29
Y/US\$	103.34	115.14	115.51	121.85	123.12	123.44	0.26	7.21
US\$/EUR	1.2279	1.1318	1.1165	1.1025	1.0956	1.0992	0.33	△2.88
CNY/US\$	6.5305	6.3681	6.3105	6.3620	6.3697	6.3681	△0.03	0

\* '21년 평균 환율: (₩/US\$) 1144.6원, (₩/¥100) 1041.9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3.28 (전일)	'22.3.29	'22.3.29			
					전일(3.28比)	'21년최저比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10.67	105.58	△4.6	110.9	36.9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52.40	152.95	0.4	75.3	26.7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10,227.00	10,350.00	1.2	33.5	6.8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3,606.00	3,583.00	△0.6	83.6	27.7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34,050.00	33,100.00	△2.8	108.1	58.2

## [반도체]

	'20	'21	'21.12월	'22.1월	2월	3/24	3/25	3/28	3월(~28)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42	3.73	3.88	3.78	3.78	3.77	3.87
(%, YoY)	△21.9	8.0	8.0	7.1	△0.6	△12.00	△11.70	△11.20	△11.94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7.45	7.54	7.65	7.9	8.0	8.0	7.9
(%, YoY)	7.0	32.8	32.8	33.7	33.1	33.3	33.5	33.5	33.4

##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3.4	'22.3.11	'22.3.18	'22.3.25	'22.3.25	
						전주(3.18比)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4746.98	4625.06	4540.31	4434.07	△2.3	△12.1

##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2.28	'22.3.22	'22.3.23	'22.3.24	'22.3.25	'22.3.25	
							전일(3.24比)	'21년말비
BDI	2217	2040	2546	2575	2567	2544	△0.89	14.7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협력기관

